

스위스 중립의 성격과 한반도 중립논의

장철균 (서희외교포럼 대표, 중앙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강대국에 둘러싸인 스위스의 중립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하의 한반도 중립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스위스 중립의 성공요인은 국내적으로 다양성을 통합시켜주는 정치적 타협과 높은 국민적 지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스위스 중립에 대한 의견일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한반도의 중립논의는 역사상 자주 있어 왔고, 현재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립과 통일을 연계하는 연계론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역사적 배경과 전통의 문제로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부장질서(사대교란)에 익숙한 전통을 갖고 있으나, 스위스의 중립은 유럽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질서 하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정치적 합의 도출과 국민적 지지의 문제, 한국은 생존자구책에 대해 정치적·국민적 합의를 이룬 역사적 전통이 미흡하나, 스위스는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지지로 중립을 유지·발전시켜왔다. 셋째, 분단 극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을 통한 통일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며, 합의 후에도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상호 신뢰와 실효성이 미비하다. 또한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이 가시화될 경우 남한의 독립 안정성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주변 이해관계국의 합의 문제로서,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며, 합의의 지속성과 실효성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반도 중립논의의 시기문제와 관련하여, 중립과 통일의 연계는 이상적·이론적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하다. 그리고 통일 후 중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변정세가 4강의 세력균형으로 한반도의 중립에 실효성이 검증될 때 중립논의를 가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 차

1. 서론
2. 스위스의 국가건설과 중립
3.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
4. 인도주의 중립정책
5. 세계대전과 중립
6.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평화주의
7. 국제기구 가입과 중립
8. 결론: 한국의 중립논의에 주는 시사점

1. 서론

- 스위스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높은 수준의 독립 안정성과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성공한 나라중의 하나임. 이러한 스위스 국가 건설(nation-building)의 중심에는 중립(neutrality)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중립은 스위스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
 - 중립(neutral) 용어는 라틴어 ‘ne uter’에서 유래되어 ‘양편의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함(neither one nor the other).
 - 본문에서는 중립의 용어를 중립성(neutrality), 중립화(neutralism), 국제법상의 전시중립(war neutrality), 대외정책으로서의 중립정책(neutrality policy)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사용함.
- 본문은 첫째, 스위스 중립의 역사와 전통, 둘째,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립이 어떻게 유지, 적응해 왔는가, 셋째, 스위스의 국가건설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관해 검토하고 스위스 중립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함.
- 한국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이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전략적 지역이라는 점에서 스위스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음. 그리고 한국의 역사 진행과정에서 중립 논의가 있었고 현재 분단의 상태에서도 중립 논의가 있는바, 스위스의 성공적 중립 사례는 한국의 중립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2. 스위스의 국가건설과 중립

가. 다민족·다문화 사회

- 다양한 언어
 - 독일어(63.7%), 프랑스어(20.4%), 이탈리아어(6.5%), 로망슈어(0.5%), 기타(8.9%).
- 다양한 종교
 - 가톨릭(41.8%), 개신교(35.3%), 이슬람(4.3%), 기타(3.2%).

- 스위스에서는 통일성 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음.
 - 스위스의 정식 국명은 CH: Confederatio Helvetica임.
 - 4개의 공용어를 사용함.
 - 정부의 의사결정권은 주에 해당하는 26개 쾨톤(Kantone)이 갖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국방과 외교만을 관장함.
 -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국민투표(referendum)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임.

나. 동맹연합체

- 스위스는 13세기 신성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를 받았으나 이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우리(Uri), 슈비츠(Schwyz), 운터발덴(Unterwalden) 3개 지역이 1291년 원형 쾨톤(Ur-Kantone)을 형성하고 동맹 서약을 맺은 데서 출발함.
 - 이 동맹은 1332년-1513년 사이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인근지역이 연합하면서 13개 쾨톤으로 확대됨.
- 이들 쾨톤연합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자발적 무장동맹체로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군대를 물리치면서 독립의 기반을 쌓음.

다. 자결 중립(self-determined neutrality)

- 스위스의 쾨톤연합은 계속 확대해 나갔으나 1515년 프랑스와 베니스의 연합군에게 마리냐노(Mariynano) 전투에서 패배한 후 중단됨.
- 힘의 한계에 직면해 확장이 중단된 스위스 연합체는 대외적으로 독립되고 국내적으로 신·구교 간 종교분쟁이 발발하여 내부 분열에 직면함.
- 이 과정에서 스위스는 종교 갈등을 완화하고 내부적 단합(unity)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구교 간 중립에 합의하고 이를 선포함.
 - 종교분쟁을 극복하고 스위스의 통합과 단합을 이루어낸 신·구교 간의 합의는 스위스 중립이 자결주의(self-determination) 전통을 갖게 된 역사적 기원이 됨.

*종교분쟁을 극복하고
스위스의 통합과 단합을
이루어낸
신·구교 간의 합의는
스위스 중립이
자결주의(self-
determination)
전통을 갖게 된 역사적
기원이 됨*

전후 처리를 위한
비엔나회의
(1815년)에서 유럽
강대국은 스위스의
무장중립에 동의함.
이 결정은 같은 해
파리선언을 통해
스위스의 영세중립과
영토불가침을 보장함

라. 무장 중립(armed neutrality)

- 스위스 쾨톤 연합체의 중립에 대한 합의는 1617년 시작된 유럽의 30년 종교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견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또한 스위스는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 날수 있게 됨.
 - 중립의 혜택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인한 스위스 쾨톤은 연방단위의 빌(Wil)의회에서 연합체의 공동지도자를 선출하고 연방국가의 기틀을 마련함.
 - 스위스 연합체가 독립과 중립을 견지하기 위해 무장이 계속 필요함을 결정함(1647년 쾨톤 간 군사방위협정 체결).
 - 이 협정으로 스위스 연합체는 자결을 통해 무장중립을 제도화 함.
- 30년 전쟁을 마무리하는 베스트팔렌(Westphalen)회의에서 스위스는 조약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국가(state) 승인과 무장중립을 인정받음.

3.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

가. 나폴레옹 전쟁

- 프랑스 혁명군은 스위스 점령 후 스위스를 연방공동체가 아닌 헬베키아 공화국으로 개편하고, 스위스에 동맹을 강요함.
 - 스위스는 프랑스를 위해 무력이 동원됨에 따라 중립은 비자발적 중단 상황을 맞게 됨.
- 스위스는 프랑스와 반 나폴레옹 동맹국 간의 전쟁터가 되고 전마에 시달리면서, 중립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됨. 전쟁이 종료되자, 1812년 스위스는 중립을 다시 한 번 대내외적으로 선포함.

나. 비엔나회의와 파리선언

- 전후 처리를 위한 비엔나회의(1815년)에서 유럽 강대국은 스위스의 무장중립에 동의함.
 - 이 결정은 같은 해 파리선언을 통해 스위스의 영세중립과 영토불가침을 보장함.

- 이에 따라 스위스는 주변 강대국들의 합의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을 갖는 최초의 제도적인 영세중립 국가가 됨.
- 규범과 제도로서의 영세중립은 ①조약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②동맹조약과 같은 전쟁에 개입하게 될 우려가 있는 의무를 지는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며, ③관계 국가들에 의해 그 독립과 영토 보전 및 중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임.

다. 프랑스 대혁명과 종교 내란

- 1830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스위스 내 산업화된 쾨튼이 신교로 전향하고, 이들 자유·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자 신·구교 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1847년 내란으로 발전함.
- 동맹해체의 위기를 느낀 다수 세력의 신교파는 스위스의 단합(unity)을 위해 권력의 분산과 쾨튼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구교파의 입장을 수용하여 이를 신헌법에 반영함.
- 신헌법을 통해 스위스는 1848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연방국가가 됨.
- 스위스의 국내 정치적 단합은 다수가 소수에게 양보함으로써 가능했음.
- 단합을 위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적 타협 정신은 이후 스위스의 정치·사회적 전통으로 자리를 잡음.
- 이러한 정치적 타협의 중심에는 항상 국내외적 중립성이 작용함.
- 새롭게 탄생한 스위스 연방의 신헌법은 중립에 관해 연방각의와 연방의회가 ‘중립을 보호할 책임을 갖고, 이를 모니터하는 책임’을 부여함.
- 중립을 헌법상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스위스의 국가목표는 국내적 단합과 독립의 안정성 확보이며, 중립은 이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결과임.

스위스의 국내 정치적 단합은 다수가 소수에게 양보함으로써 가능했음. 단합을 위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적 타협 정신은 이후 스위스의 정치·사회적 전통으로 자리를 잡음

국제적십자 본부의
제네바 유치를 계기로
이후 유엔사무소를
포함한 수많은
국제정치·경제·
문화·스포츠 단체가
본부를 스위스에
두게 되며,
국제회의가 개최됨

4. 인도주의 중립정책

가. 적십자 운동

- 스위스는 영세중립이 국내외적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중립국의 역할을 전통적인 전시중립에 머물지 않고 인도주의 영역으로 확대함.
- 그 첫번째 조치가 전쟁 희생자를 돌보는 인도적 구호 분야인바, 계기는 1859년 스위스 청년 사업가 앙리듀냥의 적십자 활동임.
 - 이 적십자 활동을 중립국 스위스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국제적으로 확산함.
 - 국제적십자사(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의 창설을 주도하고 그 본부를 제네바에 유치함.
- 국제적십자 본부의 제네바 유치를 계기로 이후 유엔사무소를 포함한 수많은 국제정치·경제·문화·스포츠 단체가 본부를 스위스에 두게 되며, 국제회의가 개최됨.

나. 전시 부상자 수용과 구호

- 스위스는 1871년 보불전쟁(Franco-Prussian War)에서 패배한 동(東)프랑스 Bourkai 장군 부대의 전시 부상자와 포로를 스위스에 수용하여 돌보는 전시 인도적 구호 조치를 취함.
- 스위스의 전시 인도적 구호 조치는 스위스의 중립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여 줌.

5. 세계대전과 중립

가. 제1차 세계대전

-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당사자들은 전시중립을 명문화한 헤이그 협정(Hague Convention, 1907년)에 따라 스위스의 중립과 영토 불가침을 존중하기로 선언함.

- 스위스는 전 국토가 전쟁 당사자들에 의해 포위되자, 무장중립에 따라 군대를 동원하고 방어요새를 구축함. 그리고 전쟁의 어떤 당사자도 스위스의 영토 통과를 허용치 않는다고 선포함.
-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함.
 - 독일계 스위스군 최고 사령관이 오스트리아-헝가리에 공감을 표시하고, 친프로이센적 태도를 보이자 프랑스계가 분노함.
 - 국방의무에 동원된 군인들의 불만과 정당간의 이견으로 국론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됨.
 - 전쟁 불황으로 스위스 경제가 위축되고 레닌혁명에 영향 받은 스위스 노동자들의 파업동맹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야기됨.
- 스위스 연방은 독일계 각료 해임과 함께 스위스 단합을 위한 정치·경제적 타협을 이루어 내어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함.
 - 오늘날 스위스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노사분규, 노동쟁의는 이러한 중립성과 정치적 타협 정신에 기초함.

나. 국제연맹과 경제제재

- 대전의 종료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등장은 스위스의 중립과 집단 안보가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함.
 - 스위스는 무장중립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연맹에 가입하고 연방의 군사조치에는 불참, 경제제재에는 협조함.
 - 이것은 스위스의 중립이 군사조치와 경제제재에 모두 불참하는 통합적 중립(integral neutrality)과는 달리 양자를 분리하여 차별적 중립(differential neutrality)을 수용한 변화임.
- 국제연맹의 대(對)이탈리아 경제제재가 결실을 맺지 못하자, 스위스는 더이상 연맹의 경제제재에 참가치 않고 통합적 중립으로 선회함.

다. 제2차 세계대전과 무장중립

- 스위스는 대전 당사자들의 전시중립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는 한편, 자구책임 무장중립에 따라 군대를 동원함.
 - 이번에는 군총사령관을 앙리 기상(Henry Guisan) 프랑스계 장군으로 임명함.

대전의 종료와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의 등장은 스위스의 중립과 집단 안보가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함. 스위스는 무장중립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연맹에 가입하고 연방의 군사조치에는 불참, 경제제재에는 협조함

**스위스는 평화주의에
입각, 국제평화의
유지는 국제협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중립국의 역할을
인도적 구호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능동적
중립(active
neutrality)’으로
범위를 확대함**

- 나치의 파리 점령 시 스위스 내 민족갈등이 다시 심화되었으나, 기상장군의 지도력과 제1차 대전의 경험을 살려 위기를 극복함.
- 스위스 전역이 포위되고 나치군의 스위스 침공 가능성이 알려지자, 스위스군은 알프스에 배수진을 치고 저항하는 전략(Réduit Strategy)로 알프스 요새를 강화함. 그리고 독일군이 스위스를 침공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큰 댓가를 치를것(long and costly) 임을 선포함.
- 나치군은 실제 ‘Operaton Tannebaum’으로 불리는 스위스 점령작전을 세웠으나, 국제여론의 부담과 스위스 군의 저항을 고려,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짐.
- 스위스는 스위스 영공에 들어온 연합국과 추축국의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등 무장중립으로 전시중립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
- 스위스는 나치군의 군사침공을 지지하는 한편, 독일과의 금융·경제적 거래, 독일 유대인 난민의 금 유입 등으로 스위스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옴.
-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전화를 입지 않은 스위스는 초토화된 유럽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함.

6.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평화주의

가. 유엔헌장과 전쟁의 불법화

-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자위와 세력균형을 위한 무력사용이 정당화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의 탄생과 헌장은 전쟁을 불법화하고 강제조치로 전쟁 도발국을 응징하도록 함.
- 전쟁이 불법화되면서 스위스의 중립은 검토를 필요로 함. 스위스의 영세중립과 평화유지 목적의 군대 파견은 상치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유력해짐.
- 스위스는 평화주의에 입각, 국제평화의 유지는 국제협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중립국의 역할을 인도적 구호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능동적 중립(active neutrality)’으로 범위를 확대함.

나. 한국전과 중립국 감시위원단

- 국제평화유지와 국제협력정신의 평화주의에 따라 스위스는 1953년 한국전 휴전과 함께 유엔중립국 감시위원단에 참여함.

다. 유럽 국제기구의 평화유지 활동

- 1975년 동서대타트와 헬싱키협정, 그리고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부터 중립을 승인 받고 평화유지 활동에 합류함.
 - 스위스는 국제분쟁에 평화유지활동 목적으로 개입하면서 통합적 중립으로부터 차별적 중립 입장으로 전환함.
 - 1990년 걸프전 시 이란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에 참여함.
- 스위스 연방각의는 스위스의 방위를 위해 국제분쟁 지역에 필요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평가함.
 - 1995년 보스니아 평화유지군을 파견함.
 - 1996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면서, NATO의 평화유지활동(PfP: Partnership for Peace)에 참여를 결정함.
- 같은 맥락에서 2000년 코소보(Kosovo)위기 시 평화유지군을 파견함.
 - 2001년에는 Military Act의 일부수정을 통해 평화유지군의 자위목적 무장도 허용함.

라. 무장중립과 비무장중립

- 핵무기의 등장으로 스위스는 무장중립으로 영토를 방위할 수 없게 됨.
- 스위스 여론, 특히 젊은 세대는 스위스의 병역의무와 방위세 과다 등을 이유로 비무장중립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개병제와 강력한 병역의무는 존치되고 핵전쟁과 핵오염에 대비한 3500여 개의 지하 방공호 시설을 완비함.

**핵무기의 등장으로
스위스는 무장중립으로
영토를 방위할 수 없게
됨. 스위스 여론, 특히
젊은 세대는 스위스의
병역의무와 방위세
과다 등을 이유로
비무장중립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스위스 중립은
 다양성을
 통합시켜주고
 상충하는 이해를
 타협과 상생으로
 조화시켜 주는 린치핀
 (linchpin) 역할을
 담당함. 스위스 중립의
 성격과 특징은 자결
 (self-
 determination),
 무장(armed),
 영세중립
 (permanent
 neutrality)으로
 요약될 수 있음

7. 국제기구 가입과 중립

가. 유럽연합

- 스위스는 군사동맹(예: NATO)이 아닌 국가연합·국제기구의 회원국 가입은 중립과 양립 할 수 있다고 해석함. 따라서 EU 등 비군사적 연합체 참여는 가능하나 전통적 중립주의에 따라 정치적 블록에의 참여는 거부하고 있음.
- 이러한 기구들의 평화유지 활동과 인도주의 조치에는 참여함.

나. 유엔가입

- 국제연합의 강제조치와 영세중립이 양립할 수 없다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해석에 따라 스위스는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후에 영세 중립국 오스트리아가 유엔에 가입하였고 강제조치와 영세중립이 양립할 수 있다는 해석이 유력해짐에 따라 스위스 국내에 유엔가입 문제가 검토됨.
- 1986년 유엔가입문제가 국민투표로 회부되었으나 85%의 반대로 거부됨.
- 2001.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협력 통한 평화유지 입장에 따라 재투표를 시행, 54%의 찬성으로 유엔가입을 결정함.

8. 결론: 한국의 중립논의에 주는 시사점

가. 스위스 중립의 성공요인

- 스위스 중립은 다양성을 통합시켜주고 상충하는 이해를 타협과 상생으로 조화시켜 주는 린치핀(linchpin) 역할을 담당함. 스위스 중립의 성격과 특징은 자결(self-determined), 무장(armed),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자결은 국내외적 정세변화와 위기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을 도출해 내고 국민의 80% 이상이 이를 지지하는데 기초함.
- 스위스는 ‘나라는 내손으로 지킨다’는 무장중립의지가 확고하며 중립제도나 정책은 독립 안정성 확보에 보완적 수단으로 인식함.

- 영세중립 제도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일치되어 도출된 결과임.
- 스위스는 중립에 인도주의와 평화주의를 접목시켜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
- 스위스 중립의 성공요인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높은 국민적 지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주변 이해국의 스위스 중립에 대한 의견일치에 있다고 평가됨.

나. 한반도 중립 논의

- 한국의 중립이 논의된 것은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열강이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부터임. 1885년 최초의 미국유학생 유길준이 중립론을 제기한바 있음.
- 해방 후 미·소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미·소 양군 철수와 미·소·영·중의 중립 보장안이 제기 된바있고, 한국전 휴전과 제네바 정치회담에 즈음 미 국무부에서 통일·중립한국을 검토한 적이 있음.
- 4·19 민주항쟁 이후에는 대학생·진보 정치인들이 냉전하에서 미·소 간 타협과 중립가능성을 전제로 중립논쟁이 있었으나 공론화되지 못했고 1970년대 데탕트 이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브레진스키, 라이샤워 등이 한국 중립론을 제기한 바 있음.
- 한국에서 제기된 중립론 중에서 현재 검토를 요하는 것은 중립과 통일의 연계 방안으로 연계론은 ①선통일·후중립 ②선중립·후통일 ③체제수렴 후 영세중립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스위스 중립의
성공요인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높은
국민적 지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주변
이해국의 스위스 중립에
대한 의견일치에
있다고 평가됨*

다. 시사점

1) 역사적 배경과 전통의 문제

- 한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부장질서(사대교린)에 익숙한 전통을 갖고 있음. 이것은 단극체제하의 초강대국과의 안보동맹을 의미함.
- 스위스의 중립은 유럽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질서로 형성되었음. 이것은 다극체제하의 반패권 상쇄동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함.
중립과 통일의 연계는
이상적 · 이론적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함.
현재로서는
국내적으로 독립
안정성에 대한 정치적
타협의 역량축적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맹을 의미함.

2) 정치적 합의 도출과 국민적 지지의 문제

- 한국은 생존자구책에 대해 정치적 · 국민적 합의를 이룬 역사적 전통이 미흡함. 역사상의 국난(예: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도 국론이 분열(예: 자주파 vs 동맹파) 되는 경향이 있음.
- 스위스는 국내적 단합과 생존 자구책에 대한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지지로 중립을 유지 ·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합의 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운용됨.

3) 분단 극복의 문제

-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을 통한 통일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며, 합의 후에도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상호 신뢰와 실효성이 미비함.
- 중립화를 통해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이 가시화될 경우 남한의 독립 안정성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음.

4) 주변 이해관계국의 합의 문제

-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함.
- 한반도 주변세력의 이해가 일시적으로 일치한다 해도 힘과 정세가 변화할 경우 합의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5) 한반도 중립논의의 시기문제

- 중립과 통일의 연계는 이상적 · 이론적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함.
- 현재로서는 국내적으로 독립 안정성에 대한 정치적 타협의 역량축적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통일 후 생존자구책으로서의 중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변정세가 4강의 세력균형으로 한반도의 중립에 실효성이 점증할 때 중립논의를 가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자 약력

■ 장철균

現 중앙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겸 서희외교포럼 대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Johns Hopkins 대학 국제대학원(SAIS)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취득함. 1975년 외무고시 합격 후 2010년 주 스위스 대사를 마치고 퇴직함. 저서로는 ‘서희의 외교담판(2004)’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